



1st Week, December

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

Vol. 18

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

□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

-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

| 분야 | 주요 키워드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치·행정 | 비상계엄, 대통령, 해제, 탄핵, 주민투표 |
| 경제·관광 | 감귤, 생산, 농가, 수출, 여행 |
| 지역·사회 | 비상계엄, 대통령, 선포, 차량, 도로 |

※ 분석 기간 : 11월 28일~12월 4일 ;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뉴제주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- 정치·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※ 9-11 페이지 참고)

| | | |
|-------|------|---|
| 정치·행정 | 비상계엄 | -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건 - 야권의 비상계엄 대응 - 제주 지역 반응 |
| | 대통령 | -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- 탄핵 소추안 제출 - 대통령실의 사의 표명 |
| | 해제 | -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- 제주지역의 대응 -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대응 |
| | 탄핵 | - 대통령 탄핵 추진 - 정치적 갈등 격화 - 헌법재판소의 역할 |
| | 주민투표 | - 비상계엄 관련 주민 반응 - 주민의회와의 갈등 - 제주도민의 요구 |

○ 경제·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※ 12~14 페이지 참고)

| | | |
|-------|----|--|
| 경제·관광 | 감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골 수출 확대 - 감골 생산량 감소 - 감골 소비 촉진 행사 |
| | 생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지 감골 생산량 감소 - 콩 생산량 감소 - 농업 인력 지원 확대 |
| | 농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골 농가 지원 - 콩 농가 피해 지원 -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|
| | 수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골 수출국 다변화 - 수출량 감소 우려 - 감골 수출 목표와 계획 |
| | 여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워케이션 활성화 - 비짓제주 방문자 증가 - 베트남 단체 관광객 잠적 |

○ 지역·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(※ 15~16 페이지 참고)

| | | |
|-------|------|---|
| 지역·사회 | 비상계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- 시민단체의 대응 - 비상계엄의 법적 논란 |
| | 대통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 대통령 퇴진 요구 - 계엄군 동원 비판 - 헌법재판소의 역할 |
| | 선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- 도민 반발 - 경찰과 군의 동원 |
| | 차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귀포 교통사고 - 도로 교통안전 대책 - 도내 교통사고 대응 |
| | 도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사고 발생 도로 안전성 - 인도 보도블록 파손 - 도로교통안전 개선 |

□ 주간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○ 중국

- ✓ 중국 문화관광부가 수학여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9개 조항 발표,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등 중점 정책 제시, 청소년 대상 공익성 수학여행 활동의 확대 등 추진 예정
- ✓ 중국 상무부가 외자기업 안정과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, 신동력 육성, 기업 서비스 보장 등 3개 분야 9개 조항의 정책을 발표하여 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 계획
- ✓ 중국일보망이 텐센트 클라우드 문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용 여행 안내서 “China Travel Guide” 출시, 가이드는 입국절차, 전자결제, 호텔예약, 교통수단, 주요 관광지 등 실용적 정보로 구성
- ✓ 2024 국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, 수소에너지 생산, 저장운송, 산업응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험 플랫폼 관련 내용 발표
- ✓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36개 분야 119개 구체적 개혁 조치를 발표, 고용, 사회보장,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의 인사사회보장 체계 개혁 청사진 제시
- ✓ 중국 최초의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법이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, 에너지 산업의 법치 기반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,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
- ✓ 2024년 세계인터넷대회 청서가 발표, 청서에서 중국의 정보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, 디지털 경제 정책 체계화, 네트워크 공간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내용 포함
- ✓ 중국-아세안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 건설로 디지털 성과 공유, 국경간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, 국제통신 업무, 무역금융 상호연계 등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강화

- ✓ 헤이룽장성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28개 구체 조치를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와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 추진
- ✓ 중국 상무부가 금융 지원 강화, 대외무역 신동력 육성, 기업 서비스 보장 등 9개 조치를 발표하여 공업 분야 대외무역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녹색저탄소 산업 발전 강화 예정
- ✓ 중국 정부가 식량절약과 식품낭비 방지를 위한 행동방안 발표, 2027년까지 식량 손실과 식품 낭비 통계조사 제도 개선 및 식당업계의 반낭비 행동 강화 추진

○ 말레이시아

- ✓ 말레이시아의 베트남 내 벤처기업 규모가 130억 달러를 돌파하고 700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,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추진
- ✓ 말레이시아가 2023년 약 74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치 기록, 2024년 중반까지 추가로 36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통한 아세안 핵심 경제국 위상 강화
- ✓ 말레이시아의 10월 대중국 원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% 증가하여 중국의 두 번째 원유 공급국 지위를 회복하고 하루 150만 배럴의 수출 실적 달성

○ 필리핀

- ✓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테라 솔라 프로젝트 착공식을 주도하여 3,500MW 규모의 청정에너지 생산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작, 이는 연간 430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예상
- ✓ 필리핀 경제구역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,860억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하고 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, 이를 통해 2023년 전체 기록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성과 달성

○ 인도네시아

- ✓ 인도네시아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33%로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2%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, 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
- ✓ 인도네시아가 10년 만에 세 번째 조세사면제도 도입을 검토 미신고 자산 공개 시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와 GDP 대비 세율 18% 달성을 목표로 설정

○ 싱가포르

- ✓ 싱가포르 형스위 키트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 사례 논의,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계획 협의

○ ASEAN

- ✓ 페트로나스, 페르타미나 등 동남아시아 주요 에너지 관계자들이 2025년까지 메탄 배출 기준선 수립과 2030년까지 정량화 가능한 집단 메탄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약속

○ 태국

- ✓ 태국 정부가 경제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준비, 2024년 2.7%, 2025년 3%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현금 지원과 토지 장기 임대 규정 완화 검토

○ 일본

- ✓ 교토시가 2025년도 내 숙박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, 현행 세 수 52억엔 대비 2배 이상의 인상폭을 검토하며 교통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자원 마련 추진
- ✓ 일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사카에서 지도자회의 개최,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증진과 저출산 고령화, 탄소중립 실현 등 공동과제 해결 논의
- ✓ 쓰쿠바시가 공유자전거 '쓰쿠차리' 대수를 58대에서 100대로 증강하고 대여소를 50개소로 확충,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대중교통 감편에 대응하는 이동수단 확대 추진
- ✓ 반노쥬 컴비나트가 2030년까지 외부 수소 도입을 통한 기업 연료 전환, 2050년에는 연간 43만 톤 규모의 수소 제조와 외부 공급을 목표로 수소 공급기지화 추진
- ✓ 이와테현 기업국이 발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전량 현내 소비 체제로 전환, 현내 2개 기업과 특정도매공급 협정을 체결하여 연간 8만 메가와트시의 공급량 확보
- ✓ 도쿄 23개 구의 70%가 방일 외국인 대상 피난 대책을 미수립, 모든 구의 웹사이트가 다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다언어 관광안내소가 보유 구가 6개, 다언어 콜센터 보유 구는 2개만으로 나타나 재해 대비 미흡 지적
- ✓ KDDI가 치치부시에서 5kg 정도의 화물을 10km 거리까지 운송하는 드론 배송 실증실험을 시작, CO2 배출량 60%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3년간의 실험을 추진 계획
- ✓ 오사카대학 연구팀이 기존 대비 8배의 강도와 20배의 분해속도를 달성한 생분해성 폴리머 소재를 개발, 의류 섬유 재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친화적 소재 실현
- ✓ 치바현이 호텔 등 숙박객 대상 숙박세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, 수학여행생

과세 면제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촌과의 조정을 통한 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

- ✓ 가나가와현 미우라시가 '가나가와판 라이드셰어'를 12월 17일부터 본격 실시, 야간 택시 부족 보완을 위해 시가 운영 주체가 되어 연간 120만 엔의 적자를 부담하는 운영 체계 구축
- ✓ 아이치현이 나는 자동차 유람비행 후보지로 나고야성, 나고야항, 아이·지구박 기념공원 등 3곳을 선정하고 2026년도 경 유람비행 초기 모델 실현을 목표로 관광 진흥 추진
- ✓ 오키나와현이 2026년도부터 숙박세를 1인 1박당 2%의 정률제로 도입하고 현과 시정촌이 80억엔 규모의 관광진흥 재원을 확보하여 관광의 질적 전환 추진

Contents

- ☑ 언론분석: Word Cloud
- ☑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

1 언론분석: Word Cloud

- 2024년 11월 28일~12월 04일 기간,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·행정, 경제·관광, 지역·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919건임
 - 이 중 정치·행정 분야 뉴스 381건, 경제·관광 분야 181건, 지역·사회 분야 357건임
 - * 제주 대표 언론사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뉴제주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- 381건 정치·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비상계엄, 대통령, 해제, 탄핵, 주민투표 등 키워드로 나타남



[그림 1] 정치·행정 분야 뉴스의 Word-Cloud

○ 정치·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:

| | | |
|-------|------|--|
| 정치·행정 | 비상계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건 ·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,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해제 결정함. 총 약 6시간 만에 공식 해제 · 비상계엄은 헌정 유린 행위로 평가되며 야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비판과 대통령의 즉각 사퇴 촉구함. 내란 행위 규정 요구 |
|-------|------|--|

| | | |
|-------|-----|-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야권의 비상계엄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함. 정치권의 격랑 예상 · 민주당과 야권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참여하고,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예고 - 제주 지역 반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 시민사회와 도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, 도민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사퇴를 촉구 ·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, 대통령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|
| 정치·행정 | 대통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 결정. 국민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계엄 선포 ·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지방의회,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군 병력 투입 등 위헌적 성격을 지녔다고 비판받는 실정 - 탄핵 소추안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주당 등 야6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함. 정치권에 큰 논란 예상 · 탄핵 소추안 통과 시 대통령 직무 정지되며, 헌법재판소 심판 후 최종 결정 예정. 현재 재판관 전원 일치 시 인용 가능성 존재 - 대통령실의 사의 표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 표명.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 결정 ·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부 내부의 혼란을 반영하는 결정으로 평가 |
| | 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2월 4일 새벽 가결함.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 ·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되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일부 해소되었으나, 법적 위헌성 논란은 계속 - 제주지역의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계엄 해제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도민의 일상 회복 및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집중 · 제주도민사회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사퇴 요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|

| | | |
|-------|------|-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대응 · 제주도의회는 비상계엄 해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 · 시민사회와 도내 야권은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퇴를 강하게 요구 |
| 정치·행정 | 탄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 탄핵 추진 · 민주당과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·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으며,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진행 예정 - 정치적 갈등 격화 ·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,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 ·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, 여야 간 갈등은 국정 운영의 큰 혼란을 초래 가능 - 헌법재판소의 역할 ·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심판하며, 6명의 재판관이 일치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 ·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탄핵 심판에 참여 가능하며,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|
| | 주민투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 관련 주민 반응 · 제주도민을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,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 ·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, 주민투표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묻자는 의견도 제기 - 주민의회와의 갈등 · 제주도의회는 비상계엄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,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· 주민투표를 통한 민의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, 주민의회는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- 제주도민의 요구 · 제주도민사회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, 주민의 권리를 다시 찾겠다는 결의안을 발표 · 주민들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적 참여 확대와 투표를 통한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 |

- 181건 경제·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감귤, 생산, 농가, 수출, 여행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



[그림 2] 경제·관광 분야 뉴스의 Word-Cloud

- 경제·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: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| <p>감귤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귤 수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시농협은 프랑스로 감귤 300kg을 시범 수출하며 유럽시장 진출. 감귤류와 키위류를 통일 브랜드로 마케팅 진행 · 제주시농협은 뉴질랜드, 몽골, 미국 등 다수 국가로 감귤 수출. 혼합적재 및 공동운임을 통한 비용 절감 성과 취득 - 감귤 생산량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해 제주 감귤 생산량이 역대 최저로 예상되며 수출량 목표치 미달 전망. 이상 고온 등으로 열과와 일소 현상 증가 · 감귤 생산량 감소로 인해 올해 수출 목표량 4500t 달성 어려움. 노지 감귤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7.9% 감소 - 감귤 소비 촉진 행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도와 농협이 감귤데이 기념 행사로 서울 성수동에서 감귤 홍보 및 체험 행사 진행. 젊은층 소비자 관심 유도 ·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팝업스토어 운영.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도 병행 |
| <p>경제·관광</p> | <p>생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지 감귤 생산량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해 노지 감귤 생산량이 37만1000t으로 전년 대비 8.6% 감소 전망. 이상 고온으로 열과와 일소 피해가 주요 원인 |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산량 감소로 인해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상승. 작년 대비 평균 경락가격 약 20% 이상 높아짐 - 콩 생산량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제주에서 재배된 콩의 상품성 하락. 구좌농협은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1억원 지원 결정 · 제주산 콩 재배 농가의 곰팡이균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. 콩 계약 재배 농가에 현금 지원 진행 - 농업 인력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년부터 제주지역 농업 인력 공급 대폭 확대. 계절근로자와 충북 도시농부 등 인력 3만2000명 공급 예정 ·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인력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 확대. 영농현장 지원 강화 목표 |
| 경제·관광 | 농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귤 농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. 제주도와 농협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농가 소득 보전 시도 · 제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감귤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비용 절감 방안 추진. 해외 바이어와의 협력 강화 - 콩 농가 피해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산 콩의 수확량 감소. 구좌농협과 광동제약이 농가 지원을 위해 1억원 지원하기로 결정 ·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수확 시기가 지연되고, 출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음.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한 긴급 지원 결정 -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 농협 수가 증가하고, 계절근로자 수가 대폭 확대됨.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 기대 ·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도 근무 가능. 농가 이용료 절감 효과 기대 |
| | 수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귤 수출국 다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시농협은 프랑스, 뉴질랜드, 몽골, 미국 등으로 감귤 수출. '제즈머라이즈' 브랜드로 통일하여 마케팅 진행 · 혼합적재를 통한 운임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. 올해 말까지 총 1000t의 제주산 농산물 수출 계획 - 수출량 감소 우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귤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수출 목표량 달성 어려움.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 있음 · 올해 수출량은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노지감귤의 시장 가격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- 감귤 수출 목표와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해산 감귤을 약 10개국에 500여 t 수출 예정. 키워류는 일본, 대만, 동남아 |

○ 지역·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:

| | | |
|-------|------|---|
| 지역·사회 | 비상계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함. 비상사태로 인한 도민 불안감 증대 · 계엄 선포는 헌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 제기. 제주 도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 퇴진 요구 - 시민단체의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1개 단체가 대통령 퇴진 요구 대회 개최. 스마트폰 플래시로 촛불 집회 형태 진행 · 도민 대회에서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. 대통령의 즉각 사퇴 및 책임자 처벌 촉구 - 비상계엄의 법적 논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 변호사협회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며 즉각 해제 및 책임자 처벌 요구. 법적 요건 미충족 비판 ·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의 권한 제한 논란 발생. 헌법 유린 행위로 평가되며 대통령 사퇴 촉구 |
| | 대통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 대통령 퇴진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요구.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불법성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 개최 · 제주행동 등은 군사적 반란 행위로 간주.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 촉구 - 계엄군 동원 비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대통령의 계엄군 동원을 내란 행위로 규정. 시민들의 결연한 저항 촉구 · 계엄군 동원이 헌정 유린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적 비난 가능성 대두. 도민들의 민주적 저항 강조 - 헌법재판소의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시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재의 심판 필요성 언급됨. 헌법 위반 문제 제기 ·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 강조. 헌법 질서 회복 요구 |
| | 선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 결정. 도민들의 혼란과 불안 초래 · 계엄령 선포는 군 병력 동원 및 도내 혼란 가중으로 비판받음. 헌정체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- 도민 반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. 헌정질서 파괴에 대 |

| | | |
|-------|----|--|
| 지역·사회 | 차량 | <p>한 책임자 처벌 촉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948년 4·3항쟁과의 유사성 지적되며 도민들은 반인권적 조치로 간주. 계엄령 철회 요구 강력히 제기 <p>- 경찰과 군의 동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엄 선포 후 경찰과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도민들의 출입을 제한.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발생 · 국회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상황 발생. 도민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기로 결의 |
| | 도로 | <p>- 서귀포 교통사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난 3일 서귀포시 서성로에서 렌터카와 트럭의 충돌로 8명 사상.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 · 렌터카 뒷좌석 탑승자 4명 사망.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<p>- 도로 교통안전 대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귀포시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후 대응책 마련.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 관리 협업 부서 총동원 ·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전개. 도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 강조 <p>- 도내 교통사고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도내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제주도는 교통안전 캠페인 강화.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강조 · 대형사고 방지 위해 교통 단속과 안전시설 개선 진행. 렌터카 이용 시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 규칙 준수 당부 |
| | 도로 | <p>- 교통사고 발생 도로 안전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귀포시 서성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. 도로 구조 및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 우려 · 경찰은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, 서귀포시는 사고 위험 도로에 대한 재점검 진행 예정 <p>- 인도 보도블록 파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주시 삼도1동 인도 보도블록 파손으로 보행자들 불편.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지적 · 시는 긴급 보수에 나서기로 결정. 시민들의 보행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필요성 대두 <p>- 도로교통안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진행. 도로 표지판과 방호벽 개선 작업 중 · 도내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. 관련 부서 협력 강화 목표 |

2 해외(아시아) 정책동향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-|---|
| 중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 정부, 저탄소 신항산업 육성 가속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저탄소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는 점과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저탄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황 보고 - 회의에서는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완비,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, 표준 제정 강화 등을 강조하며 주요 산업 제품의 탄소발자국 계산 표준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점이 주목됨 - 산업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15차 5개년 계획 예비 연구 실시, 제조업 녹색 저탄소 발전 행동 실시,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전문 행동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, 해외 물품 관세·부가가치세·소비세 징수 방법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개인 합리적 자용 수입품에 대해 간이 방법으로 관세, 부가가치세, 소비세를 징수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개함.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합세율 체계 도입 - 거주자 여행자 면세한도 5000위안, 비거주자 여행자 면세한도 2000위안 등 현행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, 홍콩·마카오 입국 거주자 면세 기준은 별도 규정을 따르기로 함 - 우편물 발송 한도를 기존 800위안,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통일하여 상향 조정하고, 시가르 면세 반입 수량 축소 등 일부 규정을 조정할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베이징시,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개방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이징시가 제16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서비스업 개방 종합시범구와 자유 무역시험구 등을 통해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 |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중국

- 베이징시는 최근 수년간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500여 개의 개혁 조치를 도입했으며, 기업들의 규제 집행과 자금 조달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
- 개정된 조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서비스 다양화, 신탁재산 등록 메커니즘 구축, 정부 서비스 표준화·규범화·편리화 수준 제고, 전자증명서·전자인감 등 활용 추진 등의 세부 내용 포함

○ 하이난 자유무역항, 국제 데이터센터 사업 개방 확대

-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련 사업 전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책 변화
- 하이난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'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 데이터센터 발전 규정'에 따라, 고속 국경간 데이터 전용 통로를 활용한 데이터 저장·가공·거래 등 국제 데이터 서비스 제공 허용
- 게임서비스, 영상처리, 상업우주, 북두위성응용, 국경간 전자상거래, 국경간 생방송, 국경간 관광, 원격의료, 원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세부 계획 제시

○ 수산물 소비 트렌드로 본 산업 변화와 미래 전망

- 2024 중국 수산물 대회에서 글로벌 수산업 환경 변화와 중국 수산업의 고품질 발전 단계 진입이 논의되었으며, 수산물 소비량이 안정화되면서 산업 전반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는 추세
- 수산물 소비의 편의화, 영양화, 브랜드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도매시장, 외식,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이 감소하고 전자상거래, 단체구매,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신규 채널이 증가하는 유통구조 변화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중국

- 수산종자 산업이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전국 수산 원종 및 우량종 심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승인된 신품종이 306개에 달하고 매년 20여 개의 신품종이 출시되는 발전상

○ 중국, 5G+산업인터넷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

-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5G+산업인터넷 융합 응용 시범도시 건설을 통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발표했으며, 현재 4천여 개의 5G 공장과 1.5만여 개의 전국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
- 중국공업인터넷연구원에 따르면 5G+산업인터넷이 5G 발전에 광범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인터넷 발전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, 스마트 물류, 기계 시각 품질검사, 원격 설비 제어 등 다양한 응용 분야 확대
-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인터넷의 핵심은 5G+산업인터넷+인공지능의 새로운 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며, 유연 제조, 무인 공장 등 스마트 공장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중국, 전국 통일 전력시장 건설 3단계 추진계획 발표

-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주도하고 중국전력기업연합회가 참여하여 작성한 '전국 통일 전력시장 발전 계획 청서'가 발표되어 2023년 전국 시장 거래 전력량이 5.67조 킬로와트시를 기록
- 2025년까지 전국 통일 전력시장 초기 구축, 2029년까지 전면적인 통일 전력시장 구축, 2035년까지 전국 통일 전력시장 완비를 목표로 하는 3단계 발전 로드맵 제시
- 다층적 시장의 전면적 융합,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, 전력 상품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래 품종 체계 구축, 신 에너지의 상시적 시장 참여 메커니즘 구축 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|--|
| 중국 | <p>○ 중국, 2027년까지 5G 규모화 응용 전면 실현 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'5G 규모화 응용 행동 업그레이드 방안'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보편적 능력, 보편적 응용, 보편적 혜택의 발전 구도 형성 목표 제시 - 2027년까지 1만 명당 5G 기지국 수 38개, 5G 개인 사용자 보급률 85% 이상, 5G 네트워크 접속 트래픽 비중 75% 이상, 5G 사물인터넷 단말 연결수 1억 개 이상 달성 목표 - 응용, 산업, 네트워크, 생태 '4개 업그레이드'를 중심으로 5G 규모 응용의 산업 전체 체인 지원력, 네트워크 전체 장면 서비스력, 생태 다층적 협동력을 지속 증강하는 주요 과제 제시 <p>○ 중국, 디지털무역 혁신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디지털 무역을 디지털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, 2029년까지 디지털화 가능 서비스 무역 비중을 45%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 제시 - 디지털 제품 무역, 디지털 서비스 무역, 디지털 기술 무역, 디지털 주문 무역 등 세부 영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선도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 강조 -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메커니즘 구축,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 규칙 제정 참여, 국제 협력 강화, 디지털 신뢰 체계 구축 등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수립 |
| 필리핀 | <p>○ 필리핀 무역적자, 2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리핀의 무역적자가 9월 기준 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수출 정체와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현황 - 주요 수출품인 전자 및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이 싱가포르, 한국, 대만 등 여타 국가들 대비 하락하고 있으며, 식품, 금속 등 비전자 산업 수출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보였으나 손실 |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--|---|
| 필리핀 | <p>상쇄에는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 유출 증가로 폐쇄화 가치 절하가 우려되며,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계획으로 무역적자 위기가 심화될 수 있으나 송금과 관광 부문의 성과가 일부 상쇄 효과를 보임 |
| | <p>○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, 2030년 600억 달러 규모 성장 전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글, 테마섹,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이 2030년까지 약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3% 증가한 210억 달러 예상 - 비디오 커머스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, 패션 및 전자제품 등 전통적 부문과 함께 가구 및 식료품 등 신규 부문이 부상하는 시장 트렌드 관찰 -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비디오 커머스, 인앱 광고,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|
| | <p>○ 필리핀-UAE, 포괄적 협력 강화 합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여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, 무역,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 - UAE가 필리핀의 최근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으며, 약 70만 명의 필리핀인이 걸프 국가에 거주하며 송금과 노동을 통해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강조 - 양국 간 무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UAE가 필리핀의 핵심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<p>○ 필리핀, 중국 수출 둔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리핀-중국 상공회의소 연합회가 2025년 중국의 수출 둔화 |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말레이시아

가능성을 경고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간 무역 경쟁 심화에 대비할 것을 촉구

-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싱가포르 등 인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필리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 제시

○ 말레이시아-러시아, 디지털·에너지·무역 협력 확대

- 러시아 로스콩그레스 재단이 말레이시아 기업들에게 사이버 보안, 소프트웨어 개발, 통신 등 디지털화 및 IT 분야 협력 기회를 강조
- 말레이시아가 205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70%를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러시아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 부각
- 말레이시아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과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

○ 말레이시아,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입 준비 본격화

-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입 기간 동안 아세안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역내 전력망 강화와 디지털화 추진 강조
- 중국, 일본,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남아시아 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추진
- 오라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등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역내 데이터 및 인공지능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황 강조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----|---|
| 말레이시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말레이시아, 글로벌 반도체 협력 강화로 보호무역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브라질 및 네덜란드 등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유지에 주력 - 2024년 1월~10월 전자 및 전기 수출액이 4,910억 링깃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.5% 증가했으며, 2025년 한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-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대미국 반도체 수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밝힘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말레이시아-한국, 에너지·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합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전기차, 바이오 의약품, 녹색 기술, 탄소 포집 등 분야에서 약 328억 링깃 규모의 잠재적 투자 논의 -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6년간 약 4억 7,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, 양국이 디지털 정부와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- 양국 간 무역액이 2024년 첫 10개월 간 약 911억 링깃에 달하며,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7번째 무역 상대국,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1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 |
| ASEAN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세안-모로코, 포괄적 협력 관계 강화 약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세안과 모로코가 제2차 부문별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4-2028 실질적 협력 분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모로코의 적극적인 아세안 참여를 긍정 평가 - 기후변화, 보건, 지속가능성, 무역, 디지털 경제, 농업,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지원 요청 |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-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라오스의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협력 강화 논의 |
| 싱가포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싱가포르 전 총리, 중국과 협력 강화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셴룽 전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지역 평화 유지와 번영 촉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-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체제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 발전 촉진에 합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- 싱가포르-중국 정부 간 핵심 협력 사업인 쭈저우 산업 단지 조성 30주년을 기념하며 산업 단지의 중국 경제 발전 기여도를 높이 평가 |
| 태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태국-미얀마 국경 지역 안정적 관리 체제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국 제3군 대변인이 태국-미얀마 국경이 큰 안보 위협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고 발표 - 치앙라이에서 라농까지 일부 국경 지역의 경계선 확정을 위한 주 차원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, 제3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 - 국경지대위원회 및 고위급위원회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얀마와의 국경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 ○ 태국 소매업계, 불균형적 회복세 보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국 소매업자협회는 2024년 관광 회복과 정부 예산 배분 증가로 소매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업종별로 성장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불균형적 회복세 진행 중 - 패션, 라이프스타일, 전문 소매점 등은 37% 성장을 보인 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13% 성장에 그쳤으며, 높은 가계부채와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등이 도전과제로 작용 |

| 지역 | 제목 및 주요 내용 |
|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회는 2025년 소매 부문 성장률이 3~5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, 적시 예산 배분,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,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태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태국, 정치 안정화 속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고,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조정 준비 - 프어타이당 집권 이후 2024년 첫 9개월 동안 투자 제안이 42% 증가했으며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과 달성 - 최근 프어타이당 부패 혐의가 기각되며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가운데, 향후 3년 임기 완수와 5년 내 새로운 경기부양책 도입을 목표로 설정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도네시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네시아, 15년 내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선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 이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75기가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충할 계획 발표 - 현재 250여 개의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 중 하나로서, 에너지 전문가들은 높은 석탄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 동향을 고려할 때 계획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 -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나, 2022년 약 6억 5,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기록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케다센슈HD, 오사카 키시와다시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시범 운영 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케다센슈HD 산하 이케다센슈에리어서포트가 12월 2일부터 오사카부 키시와다시에서 수요에 따른 승합 택시 서비스 실증 |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일본

실험을 시작하여 2025년 3월까지 운영 데이터 수집 예정

- 지역 택시회사인 키시와다교통이 운영을 담당하며, 이용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66개 정류장에서 승하차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AI가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시스템 도입
- 난카이전철과도 협력하여 수요응답형 교통과 난카이전철을 같은 날 이용할 경우 상업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교통 문제 해결과 외출 환경 개선 도모

○ 나가노 가루이자와, 택시 운행 30% 증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

-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가 2024년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이드셰어 도입과 현 내 지원 택시 유치를 통해 운행대수를 전년 대비 최대 30% 증가시키는데 성공
- 관광 성수기인 여름을 대비해 배차 앱 도입, 라이드셰어 시행, 응원 택시 확보 등을 신속히 추진했으며, 차년도를 위해 교통 업계 외에도 운전자 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 중
- 특히 여름철 공사 자제 기간 동안의 건설업계 인력을 운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해결책 모색

○ 삿포로 노선버스, 1년간 10% 감축으로 교통망 유지 위한 '분업' 검토

- 홋카이도 중앙버스와 JR 홋카이도버스, 조테쓰 등 3사가 12월 1일부터 삿포로 권역 노선버스를 대폭 감축하는 다이어 개정을 실시, 1년간 운행수가 10% 감소
- 심각한 운전기사 부족과 2024년 시행되는 초과근무 상한 규제 영향으로 각사가 운행구간 재검토와 '분업' 등을 통한 노선망 유지 방안을 모색 중
- 두 회사가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 한 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며, 행정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일본

- **오사카가스, 미국서 탈탄소 메탄 생산에 1천억 엔 투자 계획**
 - 오사카가스가 미래 도시가스의 주축이 될 'e메탄' 조달망 구축을 위해 미국에서 약 1천억 엔을 투자하여 제조설비 등을 정비할 계획
 - 2030년까지 연간 최대 20만 톤의 e메탄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미국 네브래스카주나 와이오밍주에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여 텍사스주의 LNG 기지를 통해 수입 예정
 - e메탄의 가격이 LNG의 5배 수준이나,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저가 수소 확보와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등을 통해 기존 LNG와 동등한 수준의 조달 비용 달성 목표
- **도요나카시, 어린이 전용 승합택시 실증실험 실시**
 - 오사카부 도요나카시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5~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승합택시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보호자의 부담 경감 도모
 - 어린이 전용 승용 시스템을 다루는 스타트업 hab와 연계하여 21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, 전용 앱으로 희망 장소와 시간을 등록하면 AI가 최적 경로를 생성
 - 시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각 가구의 부담은 없으며, 요코하마시에서 성공한 서비스 모델을 도요나카시에도 도입할 가능성 검토
- **세토내해 콤비나트, 에너지 전환의 험로 직면**
 - 이데미쓰흥산 등이 석탄에서 암모니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슈난 콤비나트에서 대규모 투자 부담과 연료 가격차가 큰 과제로 대두
 -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한 탱크,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 투자와 발전설비 개조에 1천억 엔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며,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
 - 정부의 지원정책을 주시하며 공동 발전소 건설 등 새로운 발상의 시도가 필요한 상황으로, 기업들의 전례 없는 도전이 요구됨

지역

제목 및 주요 내용

일본

- 홋카이도 비에이초 町長, “관광객과 비용 분담“ 위한 주차장 신세 도입 추진
 - 홋카이도 비에이초가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'시라카네 아오이케(靑い池)' 주차장 이용자에 대해 법정외세 부과를 준비 중
 - 연간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구 9,300명의 도시로서, 도로·수도·화장실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관광객과 적절히 분담하여 관광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
 - 농지 무단 침입, 도로 정체, 쓰레기 투기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2025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조례안 준비
- 마쓰에시, 재생에너지 시설에 허가제 도입 검토
 - 마쓰에시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 신설에 대해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며, 설치 불가 규제구역 지정과 사전협의제도 도입 방향
 - 10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·풍력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, 건축물 부착형은 적용 제외하고 자연환경과 역사적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구역 설정 예정
 - 시설 설치 시 시와의 사전협의, 지역주민 설명 등을 의무화하고 2025년 2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함

* 출처: 中国新闻网, 中国经济网, KIEP AIF, 日本經濟新聞